

# 아르헨티나의 실질임금, 생산성 및 경제성장(1950~2010)

Juan M. Graña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인구고용개발연구소 연구원)  
Damián Kennedy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인구고용개발연구소 연구원)

## ■ 머리말

지난 80년간 아르헨티나는 두 가지의 매우 상이한 경제체제를 경험했다. 첫째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수입대체 산업화(Industrialization by Import Substitution: ISI)’ 모델로, 이는 분배정책과 고임금에 의해 생성된 강력한 국내시장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육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는 합의된 명칭은 없지만, 무역 및 금융 개방을 통해 실행되었다.<sup>1)</sup> 즉 성장의 내적 유인(내수시장)이 외적 유인(수출)으로 대체된 것이다. 후자 체제의 경우,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고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격차 감소가 필수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질임금을 낮추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경제 발전에 있어 실질임금(과 소득분배)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ISI 모델 맥락에서) 매우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중남미에 대한 연구와 경제 토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합한 공식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의 관계 동향 분석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인력 분포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 뒤에서 밝혀겠지만, 2002년 경제붕괴로 시작된 지난 10년은 그 이전 시대보다 ISI와 공통점이 더 크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능적 소득분배에 대한 접근법과 아르헨티나의 임금비중 변화를 보여주고,<sup>2)</sup> 임금 비중의 결정요인(생산성과 실질임금)과 추세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들과 비교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적 결론과 함께 향후 분석 과제를 제시한다.

## ■ 20세기 중반 이후 총소득에서의 임금 비중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1955년(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2차 집권기에 축출된 해)까지 45~50%에 이른다. 군부독재 시기 동안 그 비중은 급감하여 경제침체로 IMF 관리체제였던 1959년에는 36.2%로 낮아졌다.

임금비중은 반복되는 경상수지 위기로 불안정하던 196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임금 비중이 42.5~45%로 증가하였지만, 이전 시기에 비하면 그 가치는 낮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페론의 3차 집권기인 1972~1974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중요한 반등에 이어, 임금 비중은 먼저 1975년 ‘로드리가조 조정계획(Rodrigazo adjustment plan)’<sup>3)</sup>으로 인해 1.4%포인트 감소하고, 그 다음에는 1976년 신군부독재 정권이 집권하면서 17%포인트 감소하고 말았다. 게다가, 1977년에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당시까지 최저 기록이었던 1959년 수치보다도 7%포인트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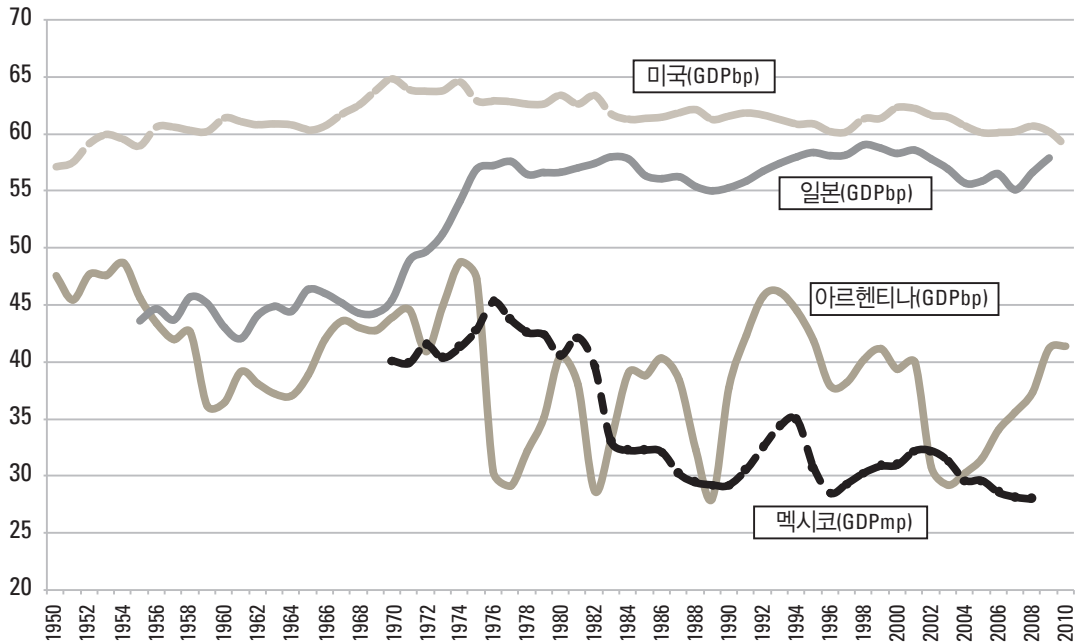
그 이후로, ‘임금 비중’은 사상 최저치에서 GDP 대비 40%라는 최고치까지 심한 변동폭을

2) 여기서 사용된 변수들의 구성은, 사소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Graña and Kennedy(2008a)에서 개발, 적용한 방법론에 의해 국가통계 당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통계자료 수집 및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0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지만, 2006년까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이 작성한 지표가 신뢰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3) ‘Rodrigazo’는 1975년에 실시된 조정경제계획으로 공공요금의 인상, 일부 시장의 가격통제력 제거,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임금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명칭은 이 계획의 시행을 추진한 경제부 장관의 이름인 셀레스티노 로드리고(Celestino Rodrigo)에서 유래한다.

[그림 1] 아르헨티나, 일본, 멕시코, 미국의 기초 및 시장가격 기준 GDP대비 임금 비중 (1950~2010)

(단위 : %)



자료 : Lindenboim, Graña and Kennedy(2011).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까지 관측되었던 증가세는 사실상 행정 외 부분에서 크게 상쇄되어서 1982년에는 그 수치가 1977년보다도 낮은 29%에 이르렀다.

1983년 민주정부의 복귀로 임금 비중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1984~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알폰신(Alfonsín)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임금 비중도 완전히 하락하였다. 1989년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로 인해 임금 비중이 다시 사상 최저치(28.1%)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46.2%를 기록하면서 수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넘어서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데킬라 위기”로 알려져 있는 1995년 멕시코 부채위기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고 임금 비중도 37.9%로 하락하였다. 1996~1997년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제붕괴의 와중에 2002년 평가절하까지 더해져 임금 비중은 12%포인트 더 하락하였다. 태환성 체제(Convertibility regime : 폐소화를 미화에 1:1로 연동시킨 체제)가 끝나면서

임금 비중은 이전 저점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약하면, 군부독재 정부 집권으로 총소득에서 임금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약 30%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비중 감소는 국제위기(1982), 하이퍼인플레이션(1989~1990), 태환성 체제 종료(2002)로 인해 반복되었던 것이다.

태환성 체제가 마감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르면서, 2006년에는 임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 아르헨티나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감소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몇 년간 회복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회복세의 실재를 확신하기가 어렵다. 회복세의 실재를 인정한다면, 거의 1년 사이에(2003년에도 수치가 약간 감소) 잃었던 것을 되찾는 데 6년이 걸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그중 5년간은 상당한 경제확장 국면이었다). 그렇다면 총소득에서 임금 비중은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하에서 달성하였던 ‘최고치’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든 시기를 철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림 1]은 아르헨티나, 미국, 멕시코가 공통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임금 비중’이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일본만 유일하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후 ‘임금 비중’ 증가를 하락이나 정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점은 각국의 변화 정도 및 가변성 측면에서 평가하게 되면 그 의미가 감소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약 5%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아르헨티나는 1974년의 ‘최고치’를 고려해 보면 임금 비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멕시코의 상황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심각하다. 가변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림 1]에서 보면, 이른바 ‘선진국’의 임금 비중 감소는 중남미 국가, 특히 아르헨티나의 급격한 변동<sup>4)</sup>과는 달리 비교적 순탄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4) ‘선진국’은 임금 비중이 60%에 가까운 반면에 중남미 국가는 50% 미만으로 절대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따르고 있는 접근법의 관점에서는, 절대치보다는 그러한 변수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 ■ 임금 비중의 변화 원인

### 기능적 분배 결정요인 파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능적 분배’ 접근법에 의해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력의 분포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출계산식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출발점은 임금(근로자 및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을 총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되며, 이 수치는 경상가격 국내총생산 기초가격(GDP<sub>bp</sub>)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분자는 월평균 임금(W<sub>month</sub>)을 개월 수와 임금근로자 총수로 곱한 수이며, 분모는 불변가격 국내총생산 기초가격(GDP<sub>cons pr</sub><sup>bp</sup>)을 잠재적 물가지수(Implicit Price Deflator, IPD)<sup>5)</sup>로 곱한 수에 해당한다.

그 다음 행에서는, 분모에 1년의 개월 수와 임금근로자 총수를 곱하고 나누어 재분류한다. 세 번째 행은 그 세 가지 수식 요소에 특정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begin{aligned} \text{비중} &= \frac{\text{임금}}{\text{소득}} = \frac{W_{\text{month}} \times 12 \times \text{임금근로자}}{\text{IPD} \times \text{GDP}_{\text{prcons}}^{\text{bp}}} \\ \text{비중} &= \frac{W_{\text{month}} \times 12 \times \text{임금근로자}}{\text{IPD} \times \frac{\text{GDP}_{\text{prcons}}^{\text{bp}}}{12 \times \text{고용}} \times 12 \times \text{임금근로자}} = \frac{W_{\text{month}}}{\text{IPD}} \times \frac{W_{\text{month}}}{\frac{\text{GDP}_{\text{prcons}}^{\text{bp}}}{12 \times \text{고용}}} \times \frac{\text{임금근로자}}{\text{고용}} \\ \text{비중} &= \text{노동비용} \times \frac{1}{\text{생산성}} \times \text{임금근로자 비중} \end{aligned}$$

W<sub>month</sub> : 월임금  
 IPD : 잠재적 물가지수  
 GDP : 국내총생산  
 Bp : 기초가격  
 Cons pr : 불변가격

5)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추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분석 대상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고용근로자 수, 시간당 임금 대신 월임금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는 산출식은 Graña and Kennedy(2008b)를 참조하라.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는 노동비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즉, 사용자의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 명목임금을 생산을 대표하는 물가지수, 여기서는 GDP 디플레이터로 보정하여 산출한다. 두 번째 요소는 생산성의 역수로서(즉, 임금 비중에 대한 반대 효과를 반영) 불변가격 GDP를 고용근로자 총수로 나눈 것이다.<sup>6)</sup> 끝으로, 임금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와 총고용의 비율)은 임금 비중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며, 생산성 산출 시 고용근로자의 소득과 총수를 계산하기 위한 임금근로자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정'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sup>7)</sup> 여기서는 근로자가 생산하는 것과 그 대가로 받는 것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노동비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실질임금, 즉 실질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보정한 결과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아르헨티나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변수는 모두 분석기간 모두에 걸쳐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의 임금 비중 추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 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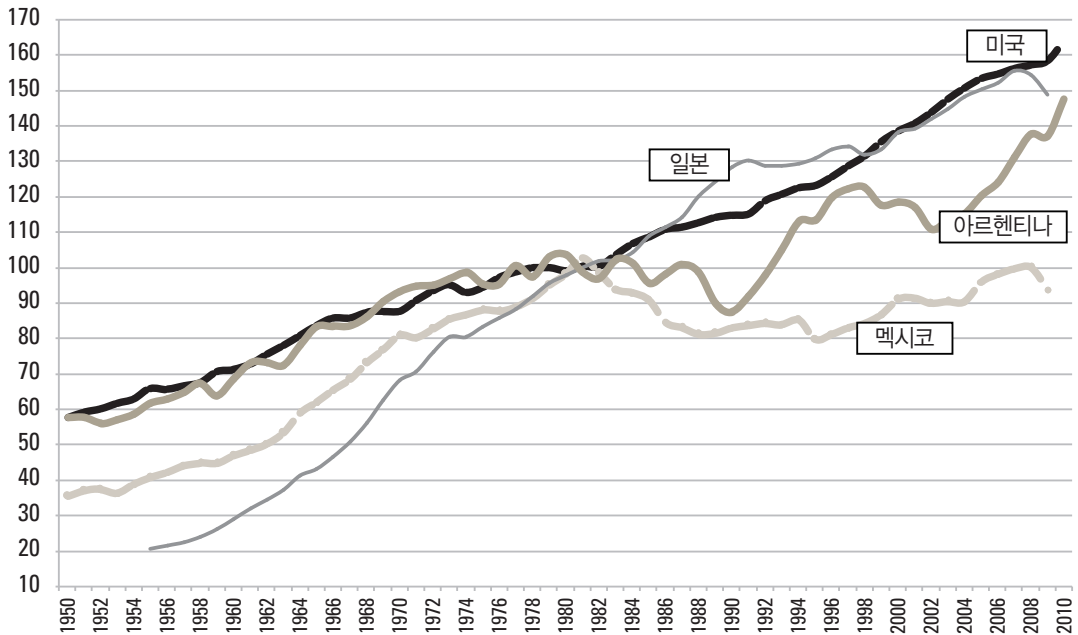
분석기간 중 아르헨티나의 생산성 추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처음 20년은 명백한 경기 확장기로 ISI 모델에 의한 이런 꾸준한 상승세는 1970년대 중반에 크게 변화한다. 군부독재 정권이 집권한 1976년부터 태환성 체제가 시행된 1991년까지, 생산성은 처음 몇 년간은 주춤하더니 1980년대 후반에는 감소하면서 매우 큰 변동폭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의 생산성은 1970년보다 5% 낮았다. 다시 말해, 거의 20년 동안 근로자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동향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급변하여, 1990~1994년까지 생산성은 29%가 넘

6) 다시 말해, 이는 전적으로 임금근로자만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각 근로자 집단이 총소득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추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생산성과 전체 고용 근로자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변화함을 전제로 한다.

7) 이 변수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그것이 임금 비중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림 2] 아르헨티나, 일본, 멕시코, 미국의 생산성 추이(1980~1982, 평균 = 100)



자료 : Lindenboim, Graña and Kennedy(2011).

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생산성 증가보다는 무역 개방 및 통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저생산성 기업 퇴출(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대기업들의 기계수입)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sup> 데킬라 위기로 야기된 경제 부진 이후에,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태환성 체제 말기(1998~2001년)의 경제 침체로 인해 바뀌었다.

2006년까지 경제성장은 노동력 확대에 의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태환성 체제하의 최고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2006년의 생산성은 1970년대 초반보다 32% 높았으며, 1980년과 1982년 사이의 평균치보다는 24% 높았다.

8) 이러한 과정이 지니는 명백한 효과는 실업률 추이에서 나타나는데, 실업률은 1980년대 6%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18%로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로, 1인당 산출량은 급증하여, 전 세계적인 위기였던 2009년에도 소폭의 감소에 그쳤다. 2010년에는 국내생산성이 1980~1982년 평균보다 48%만 높아지게 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이른바 ‘선진국’의 생산성은 분석대상 기간인 60년 동안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유일한 예외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경기침체기). 아르헨티나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근로생산역량의 추이만을 논하고 있으며 그 절대치는 다루지 않지만, 그러한 역학관계가 아르헨티나의 절대적 생산성 격차의 확대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멕시코는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정체와 하락을 보이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는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실질임금의 추이

생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림 3]은 아르헨티나의 실질임금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ISI 모형하에서는 실질임금이 상승세를 보이며(비록 1958년과 1959년 사이의 하락으로 10여 년간의 성과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1970년 초반까지 실질임금은 1950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후 3년간 계속되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다. 1975년 ‘로드리가조’와, 특히 군부독재는 그러한 성장뿐 아니라 1950년 이래의 모든 성과를 되돌려 놓았다. 1982년 군부독재가 종식되면서 소폭 회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금의 구매력은 다시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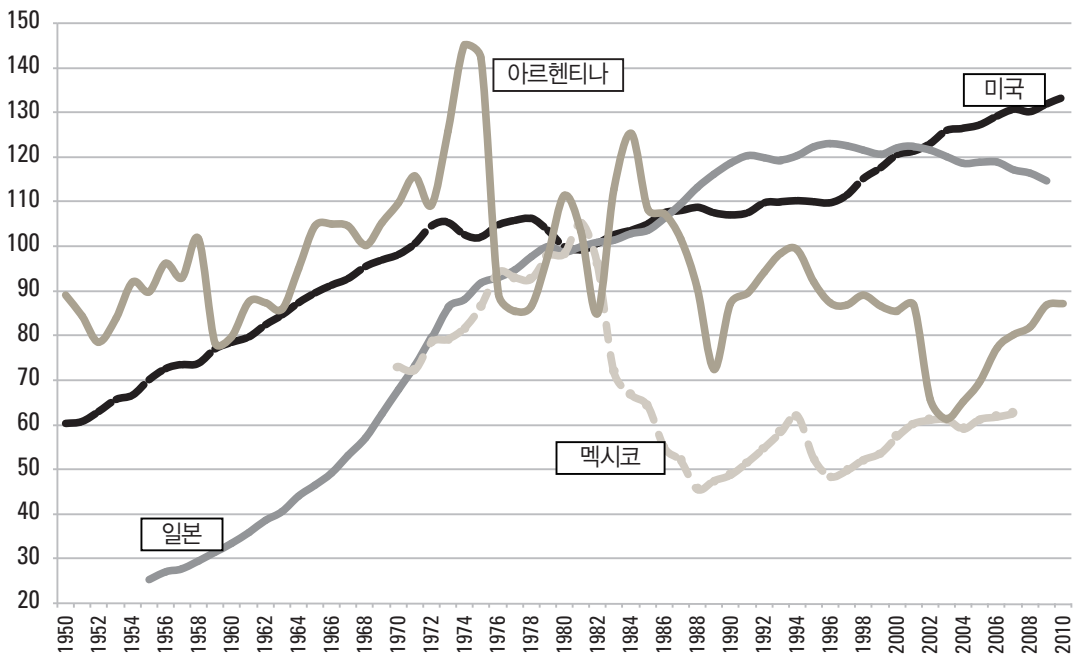
1983~1984년에 관측된 48% 증가도 일시적이었다. 1980년대 중반의 인플레이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군부독재를 넘어설 정도로 막강하여, 1989년의 실질임금은 1970년대에 달성한 구매력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도 하지만, 태환성 체제의 배후에 있는 논리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9) 가령, 미국의 절대적 수치가 더 커서 두 국가 모두 동일한 생산성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그림 3] 아르헨티나, 일본, 멕시코, 미국의 실질임금 추이(1980~1982, 평균 = 100)



자료 : Lindenboim, Graña and Kennedy(2011).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초반에는 35%의 회복을 보였으나, 그중 상당 부분은 이후 실업률의 증가, 고용조건 악화 및 경제부진으로 소멸되었다.

임금 구매력의 추가 감소가 없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그러한 희망마저도 인플레이 이후 2002년 1월의 통화 평가절하로 무너져 버렸다.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추가로 30% 하락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석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간신히 절반을 넘은 수준이었다.

가장 최근, 즉 2006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26% 증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임금은 평가절하에 의해 야기된 감소로부터 회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구매력은 준거기간(1980~1982년) 수준의 75% 정도였다. 다시 말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층은 삶의 질에 있어 어떠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최근 30년간은 하향세를 보였다.

2007~2010년의 기간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활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한다면, 실질임금은 평가절하 이전의 수치로 회복할 만큼 충분히 증가하였다. 여하튼, 이러한

최근 4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의 구매력은 현재까지 1970년대 초반 수준의 75%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사상 최고치를 감안하면 분명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즉 2010년 실질임금은 1974년보다 무려 40%나 낮아졌다.

[그림 3]을 통해, 1970년대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실질임금과 관련한 전환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향 변화가 단지 증가 속도의 감소로만 이어졌을 뿐이며, 이러한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1970년까지)에 미국은 55%, 일본은 16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그보다 긴 기간인 1970~2009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34%, 82%, 72%로 감소하였다.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먼저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멕시코는 준거기간과 최근 시기 사이에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 그 사이에 약간 다른 동향이 있다고 한다면, 1980년대에 지속되는 하락으로 실질임금은 — 1980년대 말에 — 초기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이 시작되면서 21세기의 첫 10년의 중반에는 준거기간 수준의 80%로 회복되었다.

## 다시 기능적 분배 논의로 : 생산성과 실질임금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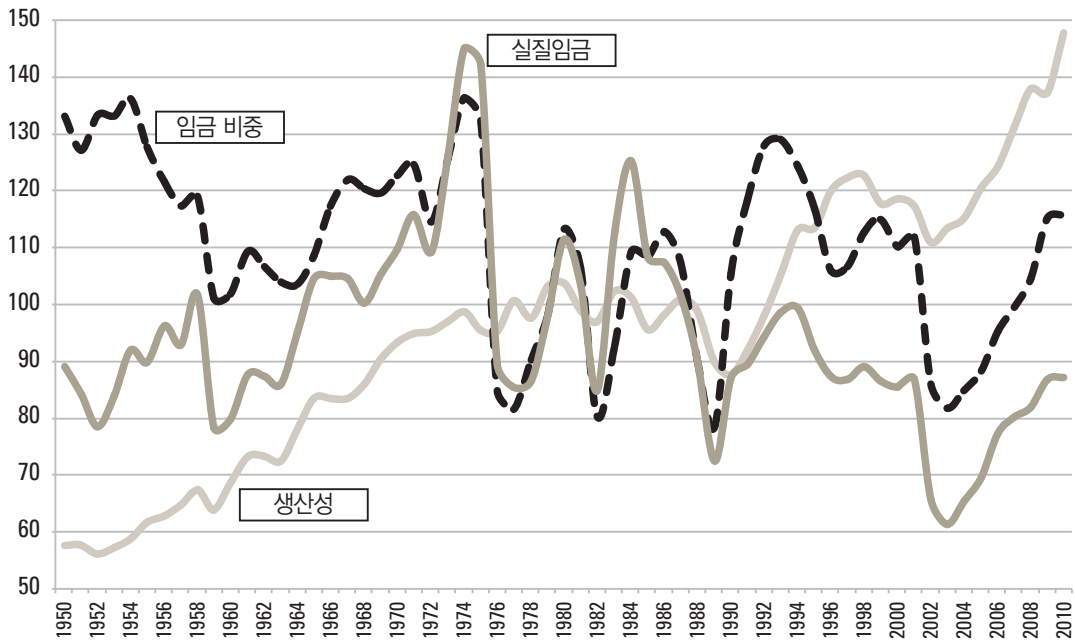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함께 소득의 기능적 분배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림 4]를 작성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처음 2년을 제외하고는, 임금 비중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마찬가지로 증가세에 있는 실질임금보다 큰 폭을 보였다(61% 대 23%)<sup>10)</sup>.

그 이후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임금 비중 추이는 거의 전적으로 실질임금의 변화로 설명

10) 이러한 일반적 과정은 196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근로보수 비중의 감소는 실질임금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로 설명되며, 반면에 이후 시기에 관측된 임금 비중 증가는 실질임금이 생산성보다 약간 더 역동적이었던 데에 기인한다.

[그림 4] GDP 기초가격, 생산성, 실질임금으로 나타낸 아르헨티나의 임금 비중(1950-2009년 추이, 1970년 = 100)



자료 : Lindenboim, Graña and Kennedy(2011).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생산성은 비교적 불변하거나 심지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83년과 1989년 사이에, 임금 비중은 사상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감소(1983~1989년의 기간에 각각 35%와 12%)가 도사리고 있다.

1982~2002년 기간에도 임금 비중은 여전히 최저치를 맴돌았다. 이러한 과정에는 실질임금의 감소(9% 감소는 전적으로 폐소화의 평가절하에 기인함)와 생산성의 증가(23%)가 동시에 작용하였다.

끝으로, 2003~2006년 기간의 '임금 비중' 회복의 원인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실질임금 증가율이 자리 잡고 있었고(각각 9.5%와 2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성은 평가절하 이전의 하락세로부터 회복한 반면에, 실질임금은 2001년에 기록한 수치보다 여전히 10% 낮은 특징을 보였다. 최근 4년간 발생하였을 상황을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2003년 29.3%에서 2010년 41.2%로의 임금 비중 증가가 실질임금 42% 성장과 생산성 30%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

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1950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임금 비중의 감소(총소득 대비 47.6%에서 34.1%로)는 생산성 증가(116%)와 실질임금 감소(13%)에 기인하였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기간을 최근 3년까지로 확대해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 즉 임금 비중은 41.4%로 감소하는 한편, 생산성은 156%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2%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전환점은 1970년대 중반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를 전환점으로 하여 양 시기에 임금 비중이 감소하였다. 즉 1950년의 47.6%에서 1970년의 43.9%로, 그리고 다시 2006년의 34.4%(또는 2010년 41.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의 근본 원인은 서로 다르다. 처음 시기에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함께 증가하였지만 (각각 62%와 23%), 다음 시기에는 생산성은 2006년까지 33% 증가한 반면에(2010년까지는 58.1%), 실질임금은 2006년까지 29.5% 감소하였다(2010년까지는 20.5%).

‘선진국’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들도 ‘임금 비중’ 및 그 결정변수의 추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에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시기 각각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행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전환점까지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이르러 상황이 바뀌면서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임금 증가율을 앞섰다. 멕시코는 역시 아르헨티나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임금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 ■ 결론

이 글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변천을 기능적 소득분배 관점과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ISI 모델의 절정기였던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실질임금의 역할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다. 근로자 임금은 내수를 통한 재화의 현금화에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는 특정치에 이르면 외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의 이중적 역할과 일차적 상품 국제물가주기(primary

products international price cycle)로서 ‘stop and go’로 알려져 있는 이 모델의 경제적 ‘상승과 하락’을 설명할 수 있다(Braun & Joy, 1968).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은 1970년대 중반까지(특정 10년간은 급감하고 또 다른 10년간은 급증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실질임금과 근로생산역량에 기인하였다. 일본, 멕시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향이 관측된다.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ISI 과정이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대부분 이후에 실현된 경제적 과정 때문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 문헌에서, 거의 모든 이들은 1975년 ‘로드리가조’가 1976년 쿠데타와 맞물리면서 갑작스럽게 ISI 모델을 단념하고 아직까지도 명칭을 붙이지 못한 — 특히, 군부독재와 태환성 체제 시기의 — 무역 개방, 해외 부채, 국가통화 과대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가 대체하게 되었다는 데에 동의한다.

ISI 모델의 폐기 이후 실시된 임금 압축에 의존한 경제정책 전략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커녕, 실질임금의 심각한 하락과 함께 생산성과 경제 부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임금, 생산성 및 경제성장은 국가 산업화를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 임금 증가를 구체적 목표로 삼았던 ISI 체제하에서 더 큰 폭으로 지속 가능하였다. 중남미 전체가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태환성 체제가 마감된 이후의 경제 과정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합의된 명칭이 없는데) 매우 양호한 동향을 보인다. 즉,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고,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변수들은 이전의 시기에 관측된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태를 보여, 운영잉여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실질임금은 급증하였고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중도 상승하였다. 이는 물론 거의 30년 동안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회복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금 구매력은 여전히 1970년대 수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중남미 전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등락이 세계 경제의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I 과정은 핵심 국가들이 이른바 복지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복지국가 정책은 1970년대 미화의 평가절하와 석유 파동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본 축적 단계는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채택해야 하는 조건부 자본 유입을 통해 이루

---

어졌다. 그 이후로, 자본 유입은 국가부채로 전환되고 1980년대에 이 지역의 경제 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아르헨티나 특유의 변천은 전 세계에 걸친 여러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자체의 경제정책 체제로 설명된다.

가장 최근에는, 인구 규모가 큰 국가들로부터 이 지역에서 대규모 생산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중남미 경제정책의 한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상황, 위기 이후 이 지역의 경제회복 속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성장 체제에 대한 의문 등이 중남미의 새로운 단계를 이야기할 만큼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긍정적이지만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인지를 물어볼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이 지역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KLI**

---

#### 참고문헌

---

- Braun, O and L. Joy(1968), “A Model of Economic Stagnation: A case study of the Argentine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78(312), December.
- Graña, J. M. and D. Kennedy(2008), “Salario Real, Costo Laboral y Productividad: Argentina 1947~2006. Análisis de la información y metodología de estimación,” Working Paper N° 12, CEPED, Buenos Aires, November.
- Lindenboim, J., D. Kennedy and J. M. Graña(2010), “La relevancia del debate sobre la distribución funcional del ingreso,” *Revista Desarrollo Económico* 49(196), IDES, Buenos Aires.
- Lindenboim J., J. M. Graña y D. Kennedy(2011), “Share of Labour Compensation and Aggregate Demand. Discussions towards a growth strategy,” Discussion Papers N° 203, UNCTAD, Geneva, September.